

21세기, 환경문제로 일어날 수 있는 몇가지 시나리오

—국가와 시민을 중심으로—



柳 敏
(서울신문 사회부기자)

지금 과 같이 환경오염이 급속으로 악화된다면 다가오는 21세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지구는 그대로 남아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예기치못한 전쟁으로 인류는 황폐의 길을 걸을 것인가. 사람들은 어떤 가치체계에 살 것이며 무엇을 행복한 삶으로 칠건가. 이를 위해 국가는 무엇을 상위정책으로 놓을 것인가.

이 모든 질문은 다분히 철학적이고 먼 얘기처럼 들릴 지 모르지만 우리가 환경에 관한 한 뭔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세계적으로 하루 1천6백만t의 탄소가 발생,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서 가까운 나라에서는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물이 있어도 오염돼 마시지 못한다. 그나마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는 「물대기」로 연일 부족간 아니면 국가 간 싸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과 동식물이 환경오염때문이라는 심증은 있으면서도 뚜렷한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다.

보다 잘 사는 나라들은 자기들끼리 가진 이른바 서방 7개국정상회담 등 각종 경제회담이 오래전부터 환경회담쪽으로 그 주제가 바뀌어가고 있다. 환경의 움직임이 경제발전을 제압하고 있는 탓이다. 최근 수 년동안 「헤이그선언」, 「스톡홀름환경회의」, 「몬트리얼협정」 등이 그것이다. 국가간에 정치·이념적인 전쟁도 환경 자원전쟁쪽으로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속에서 21세기에 우리들이 겪을 몇가지 예측가능한 일들을 생각해보는 것은 그렇게 무의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먼저 각 국가는 이념이나 단순한 경제적이익보다는 후세에 뭔가 남겨줄 「환경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최근 이라크의 쿠웨이트점령과 이에 따른 미국의 군사 개입을 정치·이념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없다. 혹자는 경제적 이익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을지 모르나 고갈되어 가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환경전쟁」으로 규정하는 쪽이 더 정확하다.

76년 경제정상회담으로 시작된 서방7개국정상회담은 89년부터 기후변동과 삼림멸종 오존층의 고갈 등 환경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 24개국가가 「헤이그환경선언」을 주장하는가 하면 1백16개국이 스위스 「바젤」에서 만나 「독성폐기물의 국제적이동과 처리에 관한 조약」을 만들기도 했다. 또 UN안전보장이사회에 환경보호역할을 부여하자! 신탁통치위원회는 환경기구로 대체하자! 등의 제안이 각국 환경회담에서 심심찮게 쏟아지고 있다.

이 모든 국가의 움직임은 바야흐로 「경제블력」이 아닌 「환경블력」의 타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선진국은 그들대로 각종 명분을 앞세워 후진국에 「공해수출」을 기도하려 든다. 후진국은 기술나후로 인해 뒤늦게 어쩔 수 없이 독성물질이 담긴 상품을 개발, 무역교환을 이루려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일고있는 「환경불력」은 동북아 동남아국가들의 「환경불력」구성을 촉진, 모든 국가는 경제문제와 연루된 환경이익을 따라 행동하게됨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익의 추구는 쉽게 전쟁상황을 이끌지도 모른다.

국가간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 국가의 국민과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패턴을 강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예기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재생가능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폐기물의 재이용 등으로 새로운 영역의 직종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자동차조립과 도로건설 탄광분야는 사양길에 접어들고 대신 자전차 등 무공해대중교통설비, 광전지 풍력터빈분야에도 고용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대체에너지개발로 정유공장자체가 없어질 지 모른다. 풍력기술과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사람, 태양열건축가 등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특히 자연보호활동이 강화되면서 농림업에 대해 인력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될 것이다.

지난 84년부터 지구환경보고서를 매년 펴내고 있는 레스터 브라운같은 이는 서기 2천30년 전에 거대도시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화는 거꾸로 전개되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따른 에너지부족분을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대체개발해야 하므로 작은 단위의 거주지역이 늘어나게 된다. 지역별로 바람이 많다든지 햇빛이 좋다든지 지열저장고가 가깝든지 자연적 혜택을 이용하려 드는쪽으로 가기 때문이다. 주택단위나 그 구조가 변화될 수 밖에 없다.

소비패턴도 벌써부터 「덜 쓰고 덜 먹고 덜 버리기」등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당연히 변화할 것이다. 단순하고 소비를 적게 하는 생활양식이 필요해짐에 따라 어쩌면 새 자동차나 새 옷을 지니는 행위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치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일고있는 「환경불력」은 동북아 동남아국가들의 「환경불력」구성을 촉진, 모든 국가는 경제문제와 연루된 환경이익을 따라 행동하게됨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익의 추구는 쉽게 전쟁상황을 이끌지도 모른다.
국가간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 국가의 국민과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패턴을 강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교통수단에 있어서는 우선 대기오염의 주범인 기존의 자동차가 지금의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교통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신 전철, 철도망과 무공해차량인 태양열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이 그런대로 일반화 될 전망이다. 특히 21세기에는 자전거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일부에서는 점치고 있다. 이미 유럽국가일부와 일본 중국 등에서는 일부 도시에서 자전거통학 출퇴근률이 40%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중국의 천진이 77%, 네델란드 그로닝겐이 50%, 독일 어랑겐 26%, 일본 동경이 25%로 나타나고 있다. 교통체증현상과 대기오염악화로 자전거사용은 세계적으로 급증할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예견되는 몇가지 시나리오는 인류가 지구를 살리는 데 엄청난 댓가와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전쟁이 없다는 가정하에 생각해 본 것이다. 그러나 국가간에 진행되고 있는 환경이기주의가 끔찍한 전쟁을 불러 일으킬지 여부는 아무도 장담 할 수 없을 것이다. □